

# 온갖 비리·폭행·추태... 지역민 대표 맞나

## 지방의회 20년 일그러진 자화상

지방의회가 올해로 성년인 20년을 맞았지만, 아직까지 일부 의원들의 추태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다. 집행부 인사에 불만을 품고 근무시간에 군청 사무실에서 간부 공무원에게 집기를 던지거나 욕설을 퍼붓는가 하면, 시장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줄줄이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인 의원들까지 마치 지방의회 '추태 시리즈'를 보는 듯 하다.

회기중 고스톱 치고  
뇌물 수뢰 처벌 받고  
재산 오리발 내밀고  
공문서 위조까지...

## 지역일은 언제 주민들 한숨만

◇지역민 대표 맞나=오현섭 전 여수시장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여수지역 전·현직 지방의원 15명은 항소심에서 모두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아 자칫하다간 시의회가 마비될 위기에 처했다.

이 가운데 여수시의원 7명은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특정지역 지방의원들의 무더기 의원직 상실은 초유의 일이다. 전남도의회도 4명의 의원이 전 여수시장 비리에 휘말리면서 의원직을 잃을 처지다.

지역민을 대신해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에 충실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힘써달라며 뽑아냈더니, 온갖 불법과 비리에 연루돼 지역민 자존심만 훼손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광주 북구의회 의원 2명은 최근 회기 중 한 의원 개인사무실에서 지인 2명과 함께 속칭 고스톱을 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판돈이 크지 않고 밥값 내기 차원에서 화투를 친 점 등을 고려해 이들을 입건하지는 않았지만, 의회 회기 중이라는 점에서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화순군에서는 지난해 6월 지방의원이 "전화를 예의 없게 받는다"며 책으로 당시 공무원의 뒤통수를 내리

친 '예의없는' 짓을 저질렀다가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받아 의원직을 내놓았다.

또한, 화순군 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 3명은 지난 20일 집행부 인사에 불만을 품고 근무시간에 군청 사무실에서 간부 공무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집기를 던지던 등의 난동을 부려 물의를 빚었다.

이밖에 순천의 모 의원은 공무원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잇달아 고발해 공무원 노조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거나 부동산을 누락, 신고해 산권위로부터 경고 또는 주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받았다. 실수 또는 착오라고 보기에 그 액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다.

그런가 하면 자신의 재산을 꼼꼼하게 다스려온 의원도 적지 않았다. 전남 32명, 광주 7명 등 무려 39명이 예금이나 부동산을 누락, 신고해 산권위로부터 경고 또는 주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받았다. 실수 또는 착오라고 보기에 그 액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다.

◇제 뭇 행기에는 혈안=전남도 의회의 경우 최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를 조례까지 바꿔가며 크게 늘렸다. 19명인 위원 수를 25명으로 늘리기 위해 '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만들어 통과시켰다.

'실도없는 예산 심의'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지난해 예산 심사와 올 추경안 심사 등에서 보여준 부실 심의와 불성실한 의정 활동에 지역구 예산 행기에만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왔던 만큼 자리에만 연연하는 구태를 답습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다. 전남도의회는 또 지난해 5명의 교육의원들이 상임위원회 구성과 관련, 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민주당과 교육의원 간 갈등으로 의정 활동을 거부하는 추태를 부리기도 했다.

최근 순천시의회 김인곤(44)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시 예산 심사과정에서 비민주적이었으며, 사적인 감정과 집행부 길들이기 식으로 이뤄졌다고 폭로하고 민주당을 탈당해 파



지난 20일 화순군 의회 조유승 의장을 비롯한 의원 3명이 집행부 인사에 불만을 품고 화순군청 총무과장에게 욕설을 퍼붓고 의자를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린 직후 공무원이 찍은 현장 사진. 의원이 던진 의자에 총무과장 책상 집기까지 부서져 있고, 의자가 바닥에 널부러져 있다.

##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 인사권 독립 논란 언제까지

지난 20일 발생한 화순군 의회 의원들의 난동 사태는 의회 사무처 직원 인사 문제가 원인이 됐다. 의회 측은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의회 사무처 직원들의 인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고, 화순군 측은 "군수와 의장이 사전 협의를 했고, 의회 사무처 특정 과장을 요직으로 발령을 하지 않았다"는 데 대한 불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추천을 할 수 있을 뿐, 임명을 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돼 있어 이번 의원들의 난동은 사실상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지역정가의 분석이다.

지방자치법 제11조 제1항 제1호는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는 상위법에 반반이 가로막혀 왔다. 이 때문에 지방의회 개원 20주년을 맞아 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전국 시·도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의원 보좌관제와 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 감사청구권 등의 제도 도입을 전격적으로 추진하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에 따른 관련 법률 개정 시행을 위한 노력을 벌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단체의 장이 임명한다는 상위법에 반반이 가로막혀 왔다. 이 때문에 지방의회 개원 20주년을 맞아 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전국 시·도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의원 보좌관제와 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 감사청구권 등의 제도 도입을 전격적으로 추진하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에 따른 관련 법률 개정 시행을 위한 노력을 벌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원들의 난동은 사실상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지역정가의 분석이다. 지방자치법 제11조 제1항 제1호는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는 상위법에 반반이 가로막혀 왔다. 이 때문에 지방의회 개원 20주년을 맞아 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전국 시·도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의원 보좌관제와 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 감사청구권 등의 제도 도입을 전격적으로 추진하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에 따른 관련 법률 개정 시행을 위한 노력을 벌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 허가취소 결론 난 북구 이마트 특강 북구청 눈먼 허가 건축사 양심 실종

광주시의 '북구 매곡동 대형마트 감시 결과'는 건축 인허가 주체인 기초자치단체가 건축사의 설계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허가를 내주는 뿌리 깊은 '관행'과 건축사가 자신을 고용한 건축주의 무리한 요구에 따라 편법·위법도 불사하는 건축업계의 '묵계'가 빚어낸 합작품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미 지역사회에서 대형마트의 편법 진출 논란이 거센데도 불구하고 북구청이 현 부지에 용도가 다른 건축물 2개 등을 짓겠다고 제출한 설계도면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물론 지상층을 지하층인 것처럼 건축면적을 계산해 건축물의 높이를 규정하는 건폐율·용적률을 초과하도록 용인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설계도면도 안 보고 허가? = 북구청은 대형마트의 편법 진출에 대한 인근 상인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계속되면서 2년여 간 건축허가를 반려했다가 2심에서까지 패소하자 지난 4월 결국 허가를 내줬다. 이미 그 과정에서 건축주는 최초 샹젤리제코리아(주)에서 (주)이마트로 3차례 변경됐으며, 당시 건축주는 북구 매곡동 1-5와 12필지 8969㎡ 부지에 판매시설(대형마트)과 근린생활시설 2개등을 짓겠다고 허가를 신청했다.

이 부지에 대형마트 신축이 가능한 자연녹지와 그렇지 못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혼재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형마트를 지어야 하는 건축사와 설계사는 이 2개 동 사이에 2.5m의 간격을 둔 채 기초와 벽체, 지붕까지 같은 사실상 하나의 건축물을 설계해 북구청에 제출, 허가를 받았다. 전문부서가 아닌 광주시 감사관실에서조차 도면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북구청 건축 인허가 부서는 보지 못한 것이다.

광주시는 또 "건축사는 최종 형질 변경허가 당시 건축물 지표면적을 31.1m로 했으나 그 뒤 2개 동 건축물 사이를 15.7m 높이로 흙을 채워 52.5m를 지표면으로 해 견폐율 및 용적률을 속였다"고 지적했다. ◇주민감사청구에 드러난 '관행' = 북구청 관계자도 "3곳의 건축사가 설계도면 작성에 참여하면서 토목, 건축, 구조 등의 도면을 면밀히 살펴본지 못해 빚어진 일로 잘못은 인정하지만 고의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북구청의 이 같은 '질문'이 주민감사청구가 없었다면 드러날 수 없었다는 점에서 북구청 등 기초자치단체의 건축 인허가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l@kwangju.co.kr



아예 땀을 내리신것 같습니다

**축개원**

**U MEDI 위대항외과**

**현재 진료중**

- 개인별 맞춤형 치질수술
- 대장용종절제술
- 수면(의식해제) 위내시경
- 수면(의식해제) 대장내시경

**조동운 원장** [(전)화문외과 원장]

**오병렬 과장** [(전)화순전남대병원 전임의사]

위·대장·항문 질환치료

**위대항외과** WIDAEHANG SURGERY

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동 4-9 TEL: 062-572-2200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필 제110525-중-22784호

**“위대항외과”**

**항문병 수술이 위대한 이유?**

바로 개인별 맞춤형 치질(치핵, 치열, 치루) 수술 때문입니다!

**진료시간**

- 평일: 오전 8시30분~오후 6시 (점심시간 - 12:30~1:30)
- 토요일: 오전 8시30분~오후 1시30분
- \*공휴일은 휴진합니다.

**치질클리닉**

- 개인별 맞춤형 치질 수술 (치핵, 치열, 치루)
- 항문암절제술
- 3차원 경향문초음파실

**내시경클리닉**

- 수면(의식해제) 위내시경 (치핵, 치열, 치루)
- 수면(의식해제) 대장내시경
- 대장용종절제술

**변비클리닉**

- 배변활성실
- 바이오퍼드백 치료실

**건강검진센터**

- 건강보험검진기관
- 소화기검진 (위암, 간암, 대장암)

**버스노선**

광주공고입구 버스정류장 [금강선] 진월07 [간선] 송정29, 일곡38, 침단30, 풍암26 [지선] 금남56, 금남57

북구 매곡동 북구미래아동병원 맞은편